일본정치와 경제

 21602790 일본어일본학과 조범준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로 인해, 일본은 입헌주의에 의거한 국가(입헌국가)라고 할 수 있다.” – Wikipedia(ja)에서 인용.

21세기에 이르러서 지구상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들은 일정한 문화나 풍습, 교육에 따라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해당 집단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작게는 혈족, 친족부터 시작하여 작은 마을,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전에 따라 집단의 크기도 점점 커져왔다.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그 나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행위에 많건 적건 대부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이나 노동력 등, 기틀을 다지는 초석이 되고, 국가는 그런 기틀을 다듬어 구성원들의 안전이나 복지 등에 힘쓰는 말하자면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이 통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국가도 더러 있다.

이 중에 우리가 알아볼 국가는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해상에 위치한 섬나라인데, 일본은 1945년 포츠담 선언 이후 1947년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정식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인구는 약 1억 2천만 이상이고, 정치방식으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입헌군주제란 헌법에 기초한 정치형태로 군주가 존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사실 군주와 법이 서로 상반되는 정치성향임에도 양립할 수 있는 이유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입헌군주제가 명목상의 군주를 두고 군주가 정치에 직접적인 간섭을 할 수 없는 일종의 문화재로의 기능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총리와 국회가 정치를 도맡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은 헌법에 기초한 정치를 하고 있고, 입헌주의에 기초한 입헌국가이다. 여기서 헌법은 국가의 성립과 통치를 담당하는 근본을 규정하는 법인데,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가 그 시초이며, 미국연방이 설립될 당시 처음으로 제정된 국민에 주권과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민주국가의 초석이 된, 일종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성립과 목적, 통치기구, 통치자, 국민의 의무,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입헌주의 국가에서 최상위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게 되고, 국민과 국가는 이 헌법에 따라 존재한다고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권력 분립 체제를 통해 권력이 일정 기관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국회와 내각, 법원으로 국권을 나눴지만 실제로 가장 큰 권력은 국회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간접민주제에 의한 국민 주권의 대리자로 정치에 임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의 대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곳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있고, 헌법이 명시하는 선에서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고, 뒤에 설명할 내각을 만드는 기관이기도 하다. 반면 내각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의 선거로 의원 중 한 명이 내각 총리로 선출되어 이를 수장으로 국회의원들을 국무 대신으로 선정하여(과반수가 국회의원이나 전부는 아닐 수 있음) 만들어지는 조직이며, 주로 국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내각과 국회는 상호 보완, 혹은 견제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내각의 수장을 뽑을 수 있고 또 사직을 강요할 수 있는 반면, 내각에서도 중의원을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다. 법원은 국회에서 설정한 시스템(법률)을 바탕으로 법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삼권 분립의 역할로서는 다른 두 기관보다 소극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를 이해하고 현대 일본의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근대 일본의 마지막,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로 일본 제국은 패망하고 미 군정을 거쳐 한반도의 전쟁특수로 복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중시하며 반공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과 패전 1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제와 사회가 모두 안정을 찾았다. 이후 시행된 현행 일본 헌법에 의하여 천황이라는 지위는 사실상 박탈되고, 현행 3권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전의 일본제국 시절에도 의회의 기능이 있었고, 현재와 같은 양원제였으나, 제국의 의회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고, 투표권도 차별이 존재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었기에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 헌법이 개정되고 군정체제 덕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정당이 생기며 여러 개의 당이 분립하는 상태가 이어지다 1955년 일본사회당 우파와 좌파가 통일, 일본민주당과 자유당 및 기타 소정당이 합동하며 자유민주당(이후 자민당으로 칭함), 일본사회당(이후 사회당으로 칭함)이 여당으로 자리잡게 된, 일명 55년 체제가 시작된다.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안보를 이루고자 하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개헌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이루지 못하였고, 사회당은 다른 국소정당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당시 막강한 자민당의 밀려 사실상 2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1.5 정당체제라고도 불렀다.

5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시 노부스케에 의한 자민당의 개헌시도는 의석수가 모자라 개헌을 이루지 못하였고, 자민당은 60년대에 들어 이케다 내각으로 하여금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데. 바로 수출 주도로 인한 고도 성장책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정당 신뢰도를 높였고, 반대로 사회당은 낮아지는 지지율에 더욱 분열되며 힘을 잃어갔다. 동시에 일부 진보좌파세력의 극단적인 운동이 오히려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며 역효과를 일으켰고, 국민들은 좌파세력의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장기집권으로 인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자민당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게 된다. 70년대 후반부터 록히드 사건과 같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자민당의 신뢰도를 추락시켰으며, 당시 오일쇼크와 일본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버블경제의 붕괴 등, 국내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자민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며, 당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당원이 탈당하고 자신들의 정당을 새로 설립하면서 분열된다. 그러면서 새로이 만들어진 여러 당은 사회당에게 연대를 제안하였고, 그것을 사회당이 받아들이며 연립정권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1993년, 55년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38년만에 비로소 호소카와 모리히토를 필두로 비 자민당 내각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급조된 동맹이 오래 갈 수 없듯, 군소정당과 사회당의 연립정당은 각자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채로, 자민당에 이기기 위해서만 연대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민당을 이기자, 집권층이 되어 서로가 자신만의 의견을 내세우다 분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자민당은 다시 사회당에게 연립정권을 제안하며 무라야마 내각을 출범시킨다. 사회당 출신으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총리가 되었으나, 사회당의 지지층만 민주당으로 옮기는 결과가 되면서 제 1야당이었던 사회당이 군소정당으로 몰락하면서 결국 연정은 무너진다. 이 때, 자민당은 공명당을 연정 파트너로 바꾸고, 사회당은 여러 연정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과 제도 변화 등의 지지층 이탈로 몰락하면서 55년 체제가 막을 내린다.

 이후로 군소정당들이 모여 신잔당을 결성하였으나, 선거 부진의 영향으로 분열, 해산되면서 민주당이 재 창당하게 된다. 이 당시 일본은 아직 버블경제의 여파로 국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경제성장률은 멈추다시피 느려져버렸다. 고이즈미 내각이후로는 아베 신조 현 총리 당선까지 1년에 한번씩 총리가 바뀌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당은 제 1 야당으로 등극하여 군소정당의 세력을 차근차근 흡수하면서 의석을 늘려갔다. 그러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앞지르고, 2009년에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집권도 하였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고 동북 지방 대지진의 영향으로 다시금 자민당-공명당 연당에 패배하면서 지금의 우경화 정권의 전신인 아베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일본의 정치상황은 여러모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권력의 분립부터 보자면 일본은 총리를 선출하는 방식이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국회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총리를 선출하는데, 이 점에서 의원들 간의 알력이나, 뒷배가 생길 수도 있고, 선거의 투명성 또한 국민 선거에 비해서 불투명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내각의 중의원들 또한 총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니, 더욱 그 의혹이 생길 수 있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회와 내각이 서로 상호 견제가 아닌, 그들이 결탁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나아가 정경유착까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례로 리쿠르트 사건과 록히드 사건은 일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건들이었는데, 두 사건 모두 정, 재계인사들 간의 유착으로 일어난 비리사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까지 되었으나, 정경유착 사건이 일어난 후로도 멀쩡히 복귀하는 정치인 있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기도 할 정도로 순환되지 않는 “고여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법 쪽에서는 내각과 국회에 대한 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실상 권력 분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제의 문제 말고도 정당의 독점도 문제 시 되고 있다. 위에서 나왔던 55년체제는 사회당이 자민당의 의석 수를 견제하면서 나름대로의 균형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70년대부터 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인해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이 생겼다. 그리고 55년 체제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점점 우경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당의 위치에서 자민당의 독주를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의 일본에는 그런 조직도 없을 뿐 더러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지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민당 독재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참정의식 부족이다. 일본은 현대사회에서 몇 안되는 초고령화 국가인데, 일본의 다수를 차지하는 높은 연령대의 국민들은 과거에 있었던 경제 부흥이나, 혁신 정권의 부정적인 측면을 봤고, 기존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서 보수 진영으로의 투표를 많이 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그 수도 많이 적을 뿐 더러, 특히나 현대 사회의 큰 불만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참정의식이 매우 낮고, 현상유지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진보 세력의 득표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 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그러한 목소리가 높지 않아 실패를 저지른 정치인이 멀쩡히 복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 정권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있지만 어쩔 수 없지” 라는 입장이 많아 위에 나온 정당 독점의 문제도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일본의 정치체계는 고착화된 보수정치로 인해 정책의 변화나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반면 획일화된 정권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사회보다 안정적인 부분도 있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올바른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데에 있다고 보지만, 여러 형태의 정치상이 있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의 도움이 되고, 올바르게만 지켜질 수 있다면 좋겠다.

위키피디아(jp) – 일본의정치

<https://ja.wikipedia.org/wiki/%E6%97%A5%E6%9C%AC%E3%81%AE%E6%94%BF%E6%B2%BB#%E5%9C%B0%E6%96%B9%E3%81%AE%E6%94%BF%E6%B2%BB%E5%88%B6%E5%BA%A6>

위키피디아(jp) - 55년체제

<https://ja.wikipedia.org/wiki/55%E5%B9%B4%E4%BD%93%E5%88%B6>

위키피디아(ko) – 리크루트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A6%AC%ED%81%AC%EB%A3%A8%ED%8A%B8\_%EC%82%AC%EA%B1%B4

한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논총(1993.10), 이상식 - 現代日本政治와 自民黨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현대정치연구(2020.04), 이주경 - 일본 정치 시스템의 과제와 신진정치가의 대응